

광복60년 종합학술대회 (제9차)  
<대한민국을 위한 3대 논쟁>

- 발행인 : 함세웅
- 발행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발행일 : 2005년 10월 26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시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민주화운동이 독재국가를 대한민국으로 바꿔냈다

- 주류와 비주류의 역사사회학\* -

김호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 목 차 —

- I.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II. 산업화 과정에서의 주류와 비주류
- III. 민주화 과정에서의 주류와 비주류
- IV. 결론

## I.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를 읽는 시각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흔히 엘리트 사관과 민중 사관이 손꼽힌다. 엘리트 사관이란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엘리트이며, 역사변동을 엘리트와 그로부터 소외된 준엘리트가 벌이는 갈등과 투쟁으로 보려는 시각이다. 한편 민중사관이란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는 민중이며, 역사변동을 지배집단과 피지배집단간의 갈등과 투쟁으로 보려는 시각을 지칭한다.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주목한다면 이 두 역사관은 각기 '주류 중심적 역사관'과 '비주류 중심적 역사관'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주류 중심적 역사관이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시대'나 '박정희 시대'라는 개념이 함축하듯이 한 개인으로 상징되는 특정한 엘리트 집단이 지난 50여년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우리 현대사를 이끌어 왔던 두 세력은 산업화세력 = 보수세력과 민주화세력 = 진보세력이며,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산업화세력이 우리 사회를 주도했다면, 8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공존하면서 경쟁한 시대였다는 것이다.

\* 이 글은 완성된 논문이 아니라 발표를 위해 작성된 초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역사변동에 대한 협소하면서도 피상적인 시각이다. 프랑스 역사학자 브로델(F. Braudel)이 강조하듯이, 역사란 ‘사건’, ‘국면’, ‘구조’에 이르는 다층적인 수준에서 진행되는 것이며,<sup>1)</sup> 엘리트 또는 주류 중심적 역사관은 이 가운데 사건만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역사의 흐름은 ‘정치적 사건’의 수면 아래 놓여 있는 ‘경제적 국면’과 ‘사회적 구조’의 변화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 바로 이 점에서 ‘국면’과 ‘구조’를 중시하는 민중적 또는 비주류 중심적 역사관이 엘리트 또는 주류 중심적 역사관보다 더욱 포괄적인 문제틀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국면과 구조, 특히 국면을 중시해 지난 60년간 우리 현대사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주류가 누구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 주류 또는 ‘메인스트림’이란 경험적으로 엄밀한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언론을 포함한 공론장에서 그 사회의 변화를 움직이는 주요 세력이란 의미로 빈번히 쓰이고 있다. 문제는 주류라는 말 안에는 엘리트 집단을 특권화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암묵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다. 역사는 엘리트의 선택이나 민중의 집합행동 중 어느 하나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 가운데 보다 중요한 것은 다수를 이루는 민중의 집합의지와 집합행동이며, 엘리트의 선택 또한 바로 이런 집합의지와 집합행동의 조건 아래 이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역사의 주류는 엘리트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중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우리 역사 속에서의 주류의 의미를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1) 브로델에 따르면, 시간은 사회적 창조물이다. 그는 사회적 시간을 시간지속의 길이와 측정대상에 따라 세 개의 범주로 구별하는데, 단기지속, 중기지속, 장기지속이 그것이다(Braudel, 1958a: 131-134; 1958b).

<표> 시간지속, 연구대상, 역사

시간지속	연구대상	역사
단기지속	(정치적) 사건	사건사, 우연의 역사
중기지속	(정치·사회적) 주기, 국면	사회사, 주기의 역사
장기지속	(지리적) 구조	구조사, 지리의 역사

## II. 산업화 과정에서의 주류와 비주류

고도 경제성장은 흔히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손꼽힌다. 이 경제성장을 분석하는 데는 상이한 접근이 제시되고 있다. 제3세계에서 성공적인 '후후발' 자본주의 산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기적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그 하나라면, 양적 팽창을 인정하더라도 대내적 불균형과 불평등 및 대외종속의 심화를 내포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다른 하나이다.

박정권의 경제성장을 다루는 데서 제일 먼저 부딪치는 이슈는 과연 1960년대 초반 세계시장에의 통합전략이 불가피했는가의 문제이다. '내포적 공업화'나, '수출지향 공업화'나 선택의 문제는 수출지향이 중국에는 세계시장에의 종속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던 쟁점이다.<sup>2)</sup> 비교발전론적 관점은 이러한 선택에 대한 하나의 거시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의 자본주의 역사는 한 나라가 통합과 이탈 가운데 어느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는 산업화 초기 세계시장에의 통합정도, 국가의 개입, 그리고 내수시장의 규모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Menzel and Senghaas, 1986). 자원 및 인구, 특히 내수시장이 협소한 한국의 경우 세계시장에의 통합전략에 기반한 수출지향 산업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으로 볼 때 박정권의 산업화전략은 전후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동에 따른 국제분업의 재편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례의 하나이다(Lipietz, 1986). 70년대 이래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이 외채 문제로 인해 성장의 위기에 봉착했다면, 한국은 상품·생산·신용자본의 국제화를 특징으로 하는 국제분업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세계시장에 제조품을 특화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해왔다. 무엇보다도 전후 선진자본주의의 포드주의 확립이 가져온 대중소비재의 광범위한 수요증대는 제3세계 노동집약적 제조품의 새로운 성장공간을 창출했으며, 박정권은 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국제분업에서의 지위상승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 점에서 한국의 경우 자본주의 세계시장은 발전의 장애를 이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의 잠재력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가능케 했던 좀더 중요한 요인은 그 내적 조건인 토지개혁·분단 상황, 그리고 국가와 노동의 역할이다. 우선 이승만 정권 하에서 추진된 토지개혁은 봉

2) 한 사회 내에는 여러 축적전략들이 경합하고 있으며 하나의 축적전략이 선택되는 것은 대내외 사회세력의 이해관계와 헤게모니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5·16 군사정부는 내포적 공업화 전략을 지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대 및 대내적 조건으로 인해 수출지향 공업화 전략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木宮正史, 1992).

건적인 지주계급을 몰락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산업화에 유리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형성했다. 이러한 한국적 조건은 봉건 농업구조가 끈질기게 잔존하여 자본주의 산업화를 지체시켰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사례와 흥미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냉전분단체제의 형성이 박정권의 경제성장에 끼친 영향은 이중적이다. 박정권은 이승만 정권과는 달리 경제성장을 위해 전후 동아시아에 고착화된 냉전체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는데,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한 일본 자본의 도입과 베트남 파병을 통한 베트남 특수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木宮正史, 1996). 냉전분단체제가 낳은 또 하나의 조건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강화에 따른 새로운 이데올로기 지형이다. 분단체제의 형성과 특히 한국전쟁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내면화된 반공주의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는 물론 일상의식까지도 결정적으로 변형시켰는데, 이러한 반공주의는 한국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이병천, 1995)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60~70년대 북한과의 치열한 산업화 경쟁에서 경제적 동원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풍부한 노동력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박정권 고도성장의 좀더 직접적인 원동력이었다. 수출지향 공업화의 특징을 절대적 잉여가치 생산방식에 기반한 ‘원시적’이자 ‘유혈적’ 테일러화에서 찾을 수 있다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야말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원천이었다. 이른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의 대표 사례의 하나로 손꼽히는 박정권의 효율적인 경제정책 또한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Johnson, 1987; Amsden, 1989; Wade, 1990). 박정권 경제정책의 중요한 양 축은 금융정책과 노동정책이다. 금융정책의 경우 정권은 만성적인 자본 부족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에 대규모 외자배분은 물론 일반금리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저리의 자본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줌으로써 재벌 성장의 후견인 역할을 떠맡아왔으며, 노동정책의 경우 노동조합법·노동쟁의조정법 같은 입법적 절차에서 노동운동의 직접적인 탄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억압적 노동정책과 노동통제를 통해 ‘산업평화’와 저임금 유지를 도모해왔다.

박정권의 경제성장은 전후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확립이 낳은 국제분업의 재편과정에서 토지개혁과 냉전분단체제의 역사적 조건 아래 국가의 효율적 경제정책과 풍부한 노동력이 결합되어 나타난 이른바 ‘초대에 의한 반주변적 발전’(Cumings, 1987)이라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박정권 경제개발정책의 효율성, 특히 박정희 개인의 리더십이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음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역사적 조건의 결과나 집합의지의 실현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왜냐하

면 축적전략은 복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어떤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는 역사·구조적 조건 속에 놓인 주체 혹은 집단의 선택, 다시 말해 ‘구조와 전략의 변증법’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Jessop, 1990). 다만 주체적 조건이 중요하다고 해서 박정권의 리더십만을 특권화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자본축적이 잉여생산물의 지속적인 창출을 의미한다면, 고도성장을 담당한 주체는 박정희 개인 혹은 정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산현장의 민중이었다. 최저생계비조차 되지 않는 저임금과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감내해야 했던 이들이야말로 고도성장을 성취한 진정한 주류이자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엘리트 사관에서 옹호하는 우리 사회의 여건상 ‘불가피한’ 개발독재론도 기실 정치권을 상위파트너로, 재벌을 하위파트너로 한 엘리트 연합의 또 다른 이름이었으며, 이런 정경유착은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낳은 주요인이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50년대 원조물자의 불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한국 재벌은 박정권의 후견 아래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60년대 경제개발과정에서 외자도입의 급속한 증가, 수출시장 여건의 조성, 개발수요의 급증,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권의 금융 및 세제의 특혜가 재벌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었다면, 70년대에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국민투자기금과 저리의 금융정책은 재벌의 성장을 가속화시켰다. 현재 한국사회의 발전에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거대 재벌의 등장은 박정권의 절대적 후원 아래 관치금융과 족벌경영을 양 축으로 하여 성장한 결과였다.

요컨대, 후발 산업화 과정에서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접어둔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의 성공을 소수 엘리트 집단의 리더십에만 귀속시키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며, 사회구조의 거시적 변화와 그 변화를 이끌어왔던 광범위한 민중세력을 간과하는 역사관이라 할 수 있다.

### Ⅲ. 민주화 과정에서의 주류와 비주류

해방 이후 지난 60년간 민주화 역사를 돌아봐도 한국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주요 축은 엘리트와 준엘리트의 갈등이 아니라 이른바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립이었다. 1960년 4월 혁명, 1987년 6월 민주항쟁, 2000년 낙천·낙선운동(이하 낙선운동), 그리고 지난 해 탄핵사태와 촛불시위에 이르기까지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은 한국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널리 지적되듯이, 4월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 독재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시민사회의 ‘폭발’이었다면, 낙선운동은 10년이 넘게 지체돼왔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부활’이었다. 이 가운데 특히 6월 민주항쟁은 오랜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열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의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에서 민주화 과정에서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다. 경험적 문제이기도 하고 이론적 쟁점이기도 한 이 이슈는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근대화론의 기본 가설에 연관된 문제이다 (Lipset, 1980). 거시적인 시각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는 정합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두 요인 사이에는 여러 매개변수들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산업화는 점차로 시민사회의 밀도를 증대시키는 바, 시민사회의 이러한 성장은 피지배계급들의 정치적 조직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국가의 압도적 권력에 대한 하나의 견제세력으로 등장시킨다(Ru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 1992).<sup>3)</sup> 이러한 역사적 경험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관계에는 그 매개변수로서 시민사회의 성장과 노동자계급의 형성이라는 주체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 장기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중기적이고 단기적인 민주화의 경로는 개별 국가에

---

3)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국가, 자본주의, 계급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루쉬마이어, 스티븐스, 스티븐스의 기여이다(Ru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이들은 시민사회를 “그 특성이 반드시 엄밀하게 생산연관적이거나 정부 혹은 가족과 연관된 것이 아닌,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사회적 제도들과 결사체들의 총체”라고 정의하고(Ru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30), 거시적인 비교연구에 기반하여 그 역사적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자본주의 발전은 도시화를 낳고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집결시킬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운송수단을 발전시키며 문자해독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시민사회를 성장시킨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발전은 이 중적인 사회적 결과를 낳는데, 그 하나는 노동자계급과 중간계급의 조직 및 조직적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계급역량의 균형을 변형시키며, 다른 하나는 시민사회의 밀도(이차집단의 강도)가 증가하여 국가권력의 대항축을 형성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화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정합적 상관관계를 강조하는 립셋(Lipset, 1980)의 논의나 경제구조에 상응하는 계급연합이 민주주의의 관건이라는 무어(Moore, 1966)의 논의를 계승하는 것이지만, 민주주의 발전에서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변수들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립셋과 무어의 논의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 시민사회,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상호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국가-시민사회와 사회계급 사이의 상호관계는 매우 복잡적이며, 그것이 민주주의에 반드시 유리한 조건만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가 처음부터 노동자계급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려고 시도했던 라틴아메리카 농업수출경제의 경우 산업화의 정치·사회적 결과가 약한 노동운동과 민주화에 압력을 행사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민사회로 나타났던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Ru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286).

따라 역전되고 후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존의 지배체제가 위기에 직면한 특정 국면에서 지배블록과 피지배블록의 세력관계의 균형에 따라 민주화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박정권하에서 시민사회와 노동자계급의 피지배블록은 여러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배블록에 필적할 정도로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한국 부르주아지 계급은 민주주의에 친화적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의 가장 충실한 동맹세력이었다(신광영, 1995). 이 점에서 '부르주아지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는 무어(Moore, 1966)의 가정은 적어도 한국의 경우 적실성이 없으며, 동시에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근대화론의 가정도 시민사회와 노동자계급의 성장을 매개변수로 전제할 때에 타당하다(정상호, 1996). 박정권이 추진한 산업화의 내부 동학에는 민주화의 씨앗이 배양되고 있었다(김호기, 1995). 이렇게 배양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또하나의 억압적 권위주의 지배를 거친 다음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분출하였다.

6월 민주항쟁 이후 우리사회 민주화 과정의 방향과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이다. 먼저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현대사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이른바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 왔다(최장집, 1996).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란 상이한 계층적, 기능적, 직업적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직접 연결하려는 정치체제를 말하는데, 무엇보다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정치사회 곧 정당정치의 빈곤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국민투표제적 민주주의 하에서 국가권력은 자연 거대해지고 권위주의적 통치경향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귀결점이 1987년까지 이어진 군부독재였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이러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민주화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었다.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 앞에 국가권력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국가는 지배의 정당성과 통치력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는 전략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6월 민주 항쟁 이후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민주화는 지체되어 왔는데, 우리사회의 특수한 역사·사회적 조건, 지역주의적 정치행태, 그리고 민주화 세력의 점진적인 약화 등이 그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위로부터 추진된 정치민주화란 1980년대와 1990년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위임민주주의'와 '초대통령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머물러 있었다(O'Donnell, 1994; Oxhorn and Ducatenzeiler, 1998). 6월 민주항쟁 이후 시민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 곧 국



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낙후되어 시민단체가 오히려 기존 정당을 대신, 이른바 '준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단중기적으로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진행된 시민사회의 분화 또한 시민운동의 부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조희연, 1998; 김호기, 2005). 1987년 이전의 사회운동은 군부독재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이라는 큰 목표 때문에 민중운동과 시민운동 또는 급진노선과 온건노선간의 차이가 명확하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폭발' 이후 민주주의 절차들이 제한적으로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회운동 세력 사이에 운동의 주체, 목표, 방식, 정세에 대한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민중운동과 시민운동간의 노선분화가 진행되었다. 민주주의 이행을 경험하는 제3세계 국가들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이러한 분화 경향은 일반적으로 시민사회 내의 온건파와 급진파간의 분화로 나타나며, 우리사회의 경우 급진파는 기존의 민중운동을 고수한 반면에 온건파는 시민운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중·후반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변화 또한 시민사회의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곧 주변부 포드주의 축적체제의 확립은 6월 민주화운동에 따른 정치적 개방 속에서 이제까지 사회운동에서 간과되어 온 환경, 교육, 여성, 지방자치, 의료, 교통, 인권 등 새로운 이슈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이슈들을 담당하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대거 결성되었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러한 새로운 다층적인 구도 형성은 우리의 정치현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사회의 분화와 이와 연관된 사회운동의 분화는 민주주의 이슈를 시민사회 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 대 시민사회의 구도가 다시 한번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지난 해 '탄핵 사태'이다. 한 마디로 탄핵 사태는 '1987년 협약'의 위기라 할 수 있는데, '1987년 협약'이란 보수세력과 진보세력 간에 맺어진 민주화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며, 이 약속의 핵심은 민주주의 절차와 규칙에 대한 존중에 있었다. 탄핵 사태의 본질은 2002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민주적 승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데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 다시 말해 시민사회의 중론(衆論)이었다. 탄핵 사태가 4월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태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시민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엘리트집단이 아니라 시민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사회집단들이다. 여기에는 생산현장의 노동자계급과 ‘넥타이 부대’의 중간계급은 물론 여성·노인·청소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이 포괄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의 제도화에 있다면, 4월 혁명, 6월 민주항쟁, 낙선운동, 그리고 탄핵사태시 촛불시위는 이런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철차적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벌였던 최소한의 행동이기도 했다. 비록 군사 쿠데타로 좌절되었다 하더라도 제2공화국을 등장시키고, 노태우 정권을 거쳐 두번에 걸친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기본 원동력은 바로 이런 시민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사회운동에 있었으며, 이 점에서 민주화의 진정한 주체도 다름 아닌 ‘풀뿌리 시민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 IV. 결론

산업화와 민주화의 현대사를 반추해볼 때 역사적 변화를 엘리트의 순환으로만 이해하려는 주류 중심적 역사관은 역사적, 현실적 상상력의 빈곤을 드러내는 발상이다. 지난 60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주체는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건국 시대에서 산업화 시대, 그리고 최근 민주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평범하더라도 오순도순한 삶’을 열망해왔으며, 소박하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이들의 간절한 열망이 경제적 고도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왔다. 간단히 말해, 비주류라고 불려지는 시민사회의 이름 없는 풀뿌리 시민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주류이자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오늘날 이 풀뿌리 시민사회가 세계화의 충격으로 인해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는 무엇보다 시민사회를 세계화라는 호랑이의 등을 탄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으로 이분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간계급이 몰락하고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빠른 속도로 주변화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확대는 지난 60년간 우리사회 변화를 주도해 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새로운 시련이다. 세계화가 우리사회에 주는 충격을 과장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풀뿌리 시민사회의 인간적인 삶을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는 해방 60년을 맞이한 우리사회에서 진지하게 풀어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김호기, 1995,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사회비평사.
- \_\_\_\_\_, 2005,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아르케(근간).
- 신광영, 1995, “시민사회 개념과 시민사회 형성”, 유팔무·김호기 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 정상호, 1996,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주의: 1961-1979,” 『정치비평』 1호.
- 조희연, 1998,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당대.
- 최장집, 1996,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 木宮正史, 1992, “한국의 내포적 공업화의 좌절,”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6, “냉전구조와 경제개발,” 한배호 편, 『한국현대정치론 II』, 오름.
- Amsden, A., 1989, *Asia's Next Gia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raudel, F., 1958a. “역사학과 사회학,” 신용하 편, 『사회사와 사회학』, 창작과 비평사.
- \_\_\_\_\_, 1958b, “역사와 사회과학: 장기지속,” 신용하 편, 『사회사와 사회학』, 창작과비평사.
- Cumings, B., 1987,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Northeast Asian Political Economy,” in F. Deyo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Jessop, B., 1990. *State Theory*,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Johnson, C., 1987.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in F. Deyo (ed.), *The Political Economy of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Lipietz, A., 1987, *Mirages and Miracles*, London: Verso.
- Lipset, S., 198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enzel, U. and D. Senghaas, 1986, *Europas Entwicklung und die dritte Welt*, Frankfurt: Suhrkamp.
- Moore, B., 1966, *The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O'Donnell, G., 1994,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Vol. 5 No. 1.

Oxhorn, P. and G. Ducatenzeiler, 1998. "Economic Reform and Democratization in Latin America," in P. Oxhorn and G. Ducatenzeiler (eds.), *What Kind of Democracy? What Kind of Market?*,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Ruschemeyer, D., E. Stephens and J. Stephens,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박명림 · 조찬수 · 권혁용 옮김,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나남.

Wade, R., 1990, *Governing the Mark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